

2011. 6. 9(木). 10:00  
第175回 居昌郡議會(臨時會)  
第 1 次 本 會 議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계획에 관한」

# 聲 明 書



居 昌 郡 議 會

#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계획에 관한 성명서

|          |         |
|----------|---------|
| 의안<br>번호 | 2011-37 |
|----------|---------|

발의 년월일 : 2011. 6. 9

발의자 : 강창남, 류영수, 안철우  
백범영, 이성복, 조기원, 강철우,  
조선제, 김재권, 이애숙

## 1. 주 문

“ 별첨과 같음 ”

## 2. 제안이유

- 우리 거창군은 예로부터 전통시장이 번성하여 인근의 함양군과 전북 무주군까지 아우르면서 경남 서북부의 재래상권을 주도해 왔음.
-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멍가게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여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 이러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은 대기업의 유통업 독과점으로 서민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거창군의 경제를 고사위기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 3. 주요내용

- 롯데마트는 우리 군의 전통시장, 구멍가게 등 지역상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요구.
- 롯데마트 거창점 신축계획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 사회적 처사로서 공정사회 이념에도 어긋나는 대기업의 횡포이므로 사업 진행계획을 즉각 철회요구.
- 롯데마트가 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롯데마트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함.
- 위 사항을 바탕으로 롯데마트가 거창 군민의 뜻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만일 우리의 뜻이 외면당한다면 끝까지 거창군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천명함.

### 4. 참고사항

- 성명서안 : 별 첨
- 발송처 : 집행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
- 홍보 : 주간지, 통신사, 일간지 등

# 聲 明 書

## -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 거창군은 예로부터 전통시장이 번성하여 인근의 함양군과 전북 무주군 까지 아우르면서 경남 서북부의 재래상권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멍가게들이 줄 지어 문을 닫고,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여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은 대기업의 유통업 독과점으로 서민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거창군의 경제를 고사위기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롯데마트는 우리군의 전통시장, 구멍가게 등 지역상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영세 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계획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 사회적 처사로서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나는 대기업의 횡포이므로 사업 진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롯데마트가 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롯데마트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롯데마트가 거창 군민의 뜻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만일 우리의 뜻이 외면 당한다면 끝까지 거창군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연대 서명으로 그 의지를 밝힌다.

2011. 6. 9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